

한국경제 · 금융 · 재정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세션 2: 금융 · 통화정책 토론

2015. 8. 27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가계부채

부채 일반

은행 수익성

금융감독

기타 이슈들

가계부채(1): 무엇이 문제인가?

■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 가능성 예측은 어렵지만 부채규모의 증가함수

- 현재 가계대출의 차주 구조가 불량하지 않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
-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 예견된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시간과 정도의 문제

■ 현실적으로는 소비 위축이 중요한 문제

-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가 단지 부동산 시장 반짝 효과 유발에 그치고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여 DSR 계속 상승
-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가 순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 충당에 급급
- 경제위기 직전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후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유형은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다수: Glick and Lansing, Mervyn King의 연설문

■ 도덕적 해이도 문제

- 안심전환대출 및 기타 정책의 변경

가계부채(2) : 해법의 모색

▪ DTI와 LTV 규제 강화로 신규대출 억제가 필요

- 김소영 교수 ⇒ 거시건전성정책은 상대적으로 신용에, 통화정책은 물가에 각각 더 큰 영향 ⇒ "최근 인플레이 수준이 낮고 경기부진, 신용과다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는 경기부양, 긴축적 거시건전성정책으로는 신용축소와 금융안정 달성
- 전성인 교수 ⇒ LTV와 DTI 규제 강화 지지

▪ 모기지 상품의 혁신

- Mian and Sufi(2014)의 책임분담(Shared Responsibility) 모기지 또는 Shiller교수의 지속적 워크아웃(continuous workout) 모기지 등 신축적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여 차압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전성인 교수 언급한 non-recourse 모기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 이 제도를 사용하는 미국은 모기지 부도율이 높고, 사용치 않는 캐나다는 낮음

▪ 그 외 조치들

- 대규모 상각: 금융회사들의 사후적 위기비용을 사전적으로 미리 부담케 함
- 가계부채 총당금 제도 도입하여 은행의 가계대출 비용 인상을 추진

가계부채

부채 일반

은행 수익성

금융감독

기타 이슈들

부채 일반 : 한국의 과다한 부채규모

- 2008년 GFC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것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제고
- Mckinsey(2015)에 따르면, 한국의 부채비중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드러나는데, 과연 한국이 이를 감내할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

<표> Debt-to-GDP 비율 (%)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	합계
중국	55	65	125	38	282
한국	44	56	105	81	286
호주	31	61	69	113	274
미국	89	36	67	77	269
독일	80	70	54	54	258
캐나다	70	25	92	92	247

자료: McKinsey Global, Debt and (not much) deleveraging, Executive Summary, Feb 25, 2015

기업부채의 양극화

- **한국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
 - 한국기업 부채비율: 2005년 GDP의 76%, 2014년 105%로 크게 상승 (이보미, 2015.7)
 - 같은 기간 중 미국은 70%에서 68%, 영국은 88%에서 75%, 일본은 100%에서 103%로 위기 이전 수준 회귀 (IMF, 2015.4)
- **특히 한국은 질적 측면에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기업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2000년대 초반 26%, 2014년에는 37%**
 - 중소기업(자산규모 하위 25% 이하)의 레버리지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이 급격히 악화 (이보미, 2015.7)
 - 이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2014년 384%,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 대 영업이익)은 2002년 343% 기록 후 계속 하락하여 2011년 113%, 2013년 27%, 2014년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42%로 다소 개선
- **GDP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은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영업이익 증가속도 보다 빠르고 이것이 투자억제 효과 (debt hangover effect)**
 - 특히 중소기업(자산규모 하위 25% 이하)은 부채증가 속에서 투자 감소

가계부채

부채 일반

은행 수익성

금융감독

기타 이슈들

은행 수익성

-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하락 추세
- 은행권의 경우 2005년 이후 ROA와 ROE 하락,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

<표> 벤치마크 은행 대비 국내은행 수익성 비교

	북구은행	미국지역은행	국내은행	비고
순이자이익	0.94	2.93	1.92	
비이자이익	0.65	1.78	0.22	매우 취약
총이익	1.59	4.71	2.13	
판매관리비	-0.80	-2.88	-1.09	
대손비용	-0.09	-0.23	-0.55	매우 취약
기타이익	0.00	-0.04	-0.05	
세전이익	0.69	1.55	0.44	
ROA	0.53	1.08	0.33	매우 취약
레버리지(배)	20.9x	8.6x	13.06x	부적절
ROE	10.60	9.24	4.31	매우 취약

▪ 자료: Citi Research
금감원

- <표>에서 국내은행은, 벤치마크 은행 대비, 비이자이익과 대손비용이 취약하고 레버리지가 낮은 수준

가계부채

부채 일반

은행 수익성

금융감독

기타 이슈

금융감독

▪ 과다한 가계부채의 책임은 어디에? 정부, 감독당국, 공동 책임?

- 감독당국의 독립성 부재로 브레이크 기능(견제와 균형) 상실
- 한은의 경우도 금리정책과 신용정책을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에 맞추어 소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

▪ 협력체계의 모색

(1) 수단

- 자본금 규제, LTV/DTI 규제는 금융위/금감원 소관? 한은(한은법 제28조 15-17항, 금융기관 대출규제는 금통위 의결사항)의 역할은?
- 한은의 수단은 금리? 그 밖의 수단은 무엇? 은행세와 선물환 한도규제 집행기관

(2) 상충되는 목표의 조정 수단

- 김소영 교수(발제):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양자를 통할하는 적극적 정책 바람직 ⇒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윤석헌 외, 2013)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필요

- 감독업무 독립성 확보와 위상 제고를 위해 쌍봉형 체계 바람직

가계부채

기업부채

은행 수익성

금융감독

기타 이슈들

기타 이슈들

▪ 주로 전성인 교수 발제 관련

▪ 별제권 폐지

- 장점: 사후적으로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부수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담보대출에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
- 단점: 연체발생시 법률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법률비용 확대

▪ 제반 공적기구의 신설

-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 기능의 질적 변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동의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시장 기능 살리기가 필요